2. 정부와 지방자치

2-2. 행정부

정부 조직이란 국가 또는 행정부의 행정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행정 기관의 체계적 기구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정부 조직은 1948년 8월 15일에 처음 수립 되었으며, 1948년에 제정된 「정부조직법」에 기초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정부 조직은 11부(내무부·외무부· 국방부·재무부·법무부·문교부·농림부·상공부·사회부·교통부·체신부), 4처(총무처·공보처·법제처·기획처), 3위원회(심계원·고시위원회·감찰위원회)로 구성된 이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크고 작은 개편이 이루어졌다.

박근혜 정부는 ‘희망의 새 시대’를 모토로 2013년 2 월 정부 출범과 함께 경제 부흥(3전략, 42과제), 국민 행복(4전략, 64과제), 문화 융성(3전략, 10과제), 평화 통일 기반 구축(3전략, 13과제)이라는 4대 국정 목표를 제시 하였다. 현 정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두 가지 조직 체 계(성장 동력의 핵심 축인 과학 기술과 정보 통신 기술 을 창조 경제의 원천으로 활용해 경제 부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 체계, 국민 생활과 관련해 안전 업무 기능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를 구현할 수 있는 조직 체계) 를 강조하였다.

현 정부 조직은 17부 5처 16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7개 부서의 소관 사무 영역은 「정부조직법」(시행 2014. 11. 19, 법률 제12844호)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다.

● 기획재정부 :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 수립, 경제·재정 정 책의 수립·총괄·조정, 예산·기금의 편성·집행·성과 관리, 화폐·외환·국고·정부 회계·내국 세제·관세·국제 금융, 공 공 기관 관리, 경제 협력·국유 재산·민간 투자 및 국가 채 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교육부 : 인적 자원 개발 정책, 학교 교육·평생 교육, 학 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미래창조과학부 : 과학 기술 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과학 기술의 연구 개발·협력·진흥, 과학 기술 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개발·생산·이용, 국가 정보화 기획·정보 보호·정보 문화, 방송·통신의 융합·진흥 및 전파 관리, 정보 통신 산업, 우편·우편환 및 우편 대체에 관한 사무 를 관장한다.

● 외교부 : 외교, 경제 외교 및 국제 경제 협력 외교, 국제 관계 업무에 관한 조정, 조약 기타 국제 협정, 재외 국민 의 보호·지원, 재외 동포 정책의 수립, 국제 정세의 조사· 분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통일부 : 통일 및 남북 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정책 의 수립, 통일 교육,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 한다.

● 법무부 : 검찰·행형·인권 옹호·출입국 관리 그 밖에 법무 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국방부 :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행정자치부 :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 부 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 혁신, 행정 능률, 전자 정부, 개인 정보 보호, 정부 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 자치단체의 사무 지원·재정·세제, 낙후 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 조정, 선거, 국민 투표에 관한 사무 를 관장한다.

●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예술·영상·광고·출판·간행물·체 육·관광,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 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농림축산식품부 : 농산·축산, 식량·농지·수리, 식품산업 진흥, 농촌 개발 및 농산물 유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산업통상자원부 : 상업·무역·공업·통상, 통상 교섭 및 통상 교섭에 관한 총괄·조정, 외국인 투자, 산업 기술 연구 개발 정책 및 에너지·지하자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보건복지부 : 보건 위생·방역·의정·약정·생활 보호·자활 지원·사회 보장·아동(영·유아 보육을 포함한다.)·노인 및 장애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환경부: 자연환경, 생활 환경의 보전 및 환경 오염 방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고용노동부 : 고용 정책의 총괄, 고용 보험, 직업 능력 개발 훈련,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의 복지 후생, 노사 관계의 조정, 산업 안전 보건, 산업 재해 보상 보험과 그 밖에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여성가족부 : 여성 정책의 기획·종합, 여성의 권익 증진 등 지위 향상, 청소년 및 가족(다문화 가족과 건강 가정 사업을 위한 아동 업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무를 관장 한다.

● 국토교통부 : 국토 종합 계획의 수립·조정,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 도시·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 하천 및 간척, 육운·철도 및 항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해양수산부 : 해양 정책, 수산, 어촌 개발 및 수산물 유통, 해운·항만, 해양 환경, 해양 조사, 해양 자원 개발, 해 양 과학 기술 연구·개발 및 해양 안전 심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그림> 행정부 조직도

<그림> 정부 조직(행정 각부) 변천

**공무원 현황**

<그림> 행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현황

<그림> 공무원 정원

대한민국 공무원은 소속에 따라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으로 구분된다. 2013년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공무원 수는 998,940명이며, 이 중 행정부 공무원이 97.6%(974,518명)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입법부는 0.4%(3,993명), 사법부는 1.7%(17,431명), 헌법재판소와 선거관리위원회는 각각 0.03%(277명), 0.3%(2,721명)를 차지하고 있다(안전행정부, 2014).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행정부 공무원은 사무 범위에 따라 국가(중앙 정부) 공무원과 지방(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구분된다. 국가 공무원은 대통령이나 소속 장관에 의해 임용되어 국가 사무를 처리하며, 지방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하여 임용되어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처리한다. 행정부 공무원 중 국가 공무원의 비중은 63.2%(615,726명)인 한편, 지방 공무원은 26.8%(358,792명)를 차지하고 있다(안전행정부, 2014).

2013년 현재 행정부 17부에 소속된 국가 공무원은 총 440,845명으로 전체 공무원의 44.1%를 차지한다. 교육부 공무원은 352,538명으로 전체 공무원 중 35.3%로 부처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법무부가 각각 3.3%(33,285명), 2.1%(21,071명)를 차지하고 있다. 17부에 소속되지 않은 국가 공무원의 수는 174,881명으로 전체 공무원의 17.5%에 해당한다(안전행정부, 2014).

지도는 2012년 우리나라 행정부 국가 공무원과 지방 공무원의 지역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국가 공무원의 서비스 공간 범위는 국가 수준에서, 광역 시·도청 지방 공무원은 광역 시·도 수준에서, 시·군·구 지방 공무원은 시· 군·구 수준에서 이루어진다. 광역 시·도청 지방 공무원과 시·군·구 지방 공무원은 인구 만 명당 공무원 수의 기준을 공무원 유형별 서비스 공간 범위로 구분하였다.

2012년 현재 우리나라 행정부 국가 공무원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주로 서울특별시(164,576명), 경기도(66,494명), 대전광역시(14,840명), 세종특별자치시 (14,831명) 등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한편, 행정부 지방 공무원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광역 시·도 인 구 만 명당 광역 시·도청 지방 공무원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로 58.4명이다. 이는 우리나라 평균 (20.8명)의 약 세배에 달한다. 그 다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35.2명), 강원도(26.8명), 인천광역시(22.1명), 울산광역시(21.9명), 광주광역시(21.1명), 전라남도, 대구광역시 등의 순이며, 가장 적은 지역은 경상남도(6.5명)이 다. 또한 우리나라의 시·군·구 인구 만 명당 지방 공무원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상북도 울릉군(385.1명)과 영양군(308.7명)이고, 가장 적은 지역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17.2명)와 서구(17.7명)이다.

<그림> 공무원 현황(교육)

<그림> 공무원 현황(소방)

<그림> 공무원 현황(경찰)

<그림> 공무원 현황(검사)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 특정직 공무원(경찰 공무원·소방 공무원·교육 공무원·외무 공무원·법관, 검사, 군인, 군무 원 등), 기능직 공무원, 기타 공무원(별정직, 계약직, 고용직) 으로 나눌 수 있다. 특정직 공무원은 「국가 공무원법」과 「지방 공무원법」 이외의 독립적인 법령에 따라 범위·임 용·기능·지위 등의 세부 사안이 보장되어 있다.

교육 공무원의 범위는 「교육 공무원법」 2조 1항에 따라 교육 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 교육 행정 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 및 장학사, 교육 기관 및 교육 행정 기관 또는 교육 연구 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연구관 및 교육연구사이다. 2013년 현재 교육 공무원은 전체 346,448명이다 (안전행정부, 2014). 교원은 대학교원과 유치원·초·중·고등학교 소속 교원으로 분류된다. 유치원·초·중·고등학교 소속 교원은 인구 만 명당 전국 평균 78.9명, 대학교원은 4.5명이며, 교원을 제외한 교육 공무원은 1.1명이다.

경찰 공무원은 2006년 자치 경찰제의 시행으로 국가 공무원과 지방 공무원으로 나누어진다. 경찰 공무원은 2012년 기준 국가직 110,284명, 지방직 127명으로 총 110,41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경찰청, 2013). 시·도 경찰서 경찰 공무원은 전국 평균 4,936.9명이다. 평균을 상회하는 지역은 서울특별시, 경기도, 부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이다. 지방 경찰청 경찰 공무원은 전국 평균 1,068명(세종특별자치시 제외)이다. 평균을 상회하는 지역은 서울특별시, 경기도, 부산광역시이다.

소방 공무원은 2013년 현재 소방방재청과 중앙119구조 단 등 국가 공무원 322명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용하는 지방 공무원 39,197명으로 이루어져 있다(소방방재청, 2014). 소방본부 소방 공무원은 전국 평균 157.6명이다. 평균을 상회하는 지역은 서울특별시·경기도·부산광역시·인천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경상북도·강원도이다. 소방서 소방 공무원 은 전국 평균 2,139.2명이다. 평균을 상회하는 지역은 서울특별시·경기도·경상북도·부산광역시·경상남도·강원도 등이다.

검사는 법무부 검찰청 소속으로 검사의 조직, 직무 범위 및 인사 등의 세부 사항은 「검찰청법」에 근거한다. 2012 년 기준 검사는 총 2,012명이다(대검찰청, 2013). 대검찰청 및 고등검찰청 검사는 대검찰청(서울특별시 소재) 및 고등 검찰청(서울특별시·대전광역시·광주광역시·대구광역시 소재) 소속 검사로, 이들 지역에 188명이 있다. 지방 경찰청 및 지청 검사는 전국 평균 103.9명이다. 평균을 상회하는 지역은 서울특별시·경기도·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 등이다.

**공공 기관 현황**

<그림> 분포(2012, 2015 추정)

<그림> 임직원 수(2012, 2015 추정)

공공 기관은 유형별로 공기업(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준정부 기관(자금 관리형 준정부 기관, 위탁 집행형 준정부 기관), 기타 공공 기관으로 구분된다. 이 중 공기업이 9.7%(28개), 준정부 기관이 28.8%(83개), 기타 공공 기관이 61.5%(177개)를 차지하고 있다.

공공 기관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특별시가 전체의 60.4%(174개)를, 경기도가 14.6%(42개)를, 인천광역시가 2.8%(8개)를 차지하고 있어 수도권에 77.8%(224개)가 입지하고 있다. 한편, 대전광역시(11.5%)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공공 기관 입지 비중은 3.0% 미만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수도권 중심의 발전 전략을 토대로 경제 발전을 이루어왔으나, 최근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 지방으로의 공공 기관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2014년 11월 30일 현재 이전 대상으로 지정된 공공 기관의 수는 154개이다. 이들 공공 기관은 10개 혁신 도시와 세종특별자치시, 개별 이전 지역으로 이전한다. 혁신 도시로 이전하는 기관은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되었다. 부산은 해양·금융·영상, 대구는 의료·교 육, 광주·전남은 에너지(전력)·농생명·정보 통신, 울산은 에너지(정유)·근로 복지, 강원은 건강·관광·자원 개발, 충북은 에너지(태양광)·교육·R&D, 전북은 국토 개발· 농생명, 경북은 첨단 교통·농생명, 경남은 바이오·세라 믹, 제주는 관광·교육 학습 등으로 특화된다.

2014년 11월 현재 73개 공공 기관의 이전이 완료되었으며, 2015년에 대부분 공공 기관의 이전이 완료될 예정이다. 2012년 공공 기관 분포와 2015년 공공 기관 예상 분포는 수도권 중심의 일극 구조에서 전국적으로 균형 잡힌 다극화 구조로 변경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에 따르면 공공 기관의 수도권 분포 비율이 77.8%(전 체 288개 중 224개)에서 45.6%(전체 302개 중 138개) 로 대폭 감소하고, 지방의 공공 기관의 수는 골고루 늘어나게 된다.